도,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마련 나서

전북자치도,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건축물 내 화재안전시설 확충 · 화재대응 역량 강화
지하충전시설 안전성 제고 위한 지원 · 중점 점검 등
정부 및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체계적 시행 방침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자치도가 관련 안전대책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정부 및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종합대책은 정부정책과 연계된 화재 안전과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대책은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화재대응력 강화 3개 분야로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신축 건축물 화재 안전시설 등 적용 강화 △대형 건축물 충전시설 옥외(지상)설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제고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실태 점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유예에 따른 홍보 및 협조를 강화해 나간다.

화재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보강 및 소방대원 관계인 화재 대응훈련 등을 강화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계부서 전담팀을 구성해 전략회의를 추진하는 등 분야별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과 연계한 최종 대책을 수립했다.

참고로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지하 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전기차 안전성 확보 △화재 대응능력 강화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이다.

전북자치도는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환경산림국이 협업해 각 분야별 추진과제를 책임감 있게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본부에서는 먼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공동주택 3개 단지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올해 8월 신축 및 기축 건물에 대한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기준을 신속하게 마련했다.

오는 2025년에는 기축 공동주택 중 지상 이전이 불가한 27개 단지에 질식소화포, 감시카메라 등 화재 안전시설 4종 설치를 지원하고, 신축 건물은 건축물 심의, 성능 위주 설계단계에서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유도해 갈 계획이다.

다만, 지하층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차장 램프 인근 등 지표면 가까이 배치하고 스프링클러, 방화벽 등 6종의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대상으로 정상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오는 11월까지 우선 선정한 74개소의 공동주택 화재 안전 조사를 추진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하는 등 기축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더불어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이동식 침수조, 관창 등 관련 장비보강과 함께 소방대원 및 관계인의 화재대응훈련을 강화하고 건축물 관계자 교육을 지속 추진한다.

건설교통국에서는 대형건축물 충전시설 옥외(지상) 설치를 위해 공공건물 건축설계 공모 지침서 가이드 라인과 민간 건축물 도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9월 중에 마련하고 시군과 LH, 전북개발공사에도 전기차 충전기 옥외(지상) 설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이외의 건축물은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시군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산림국에서는 먼저, 도내 지하충전시설의 91%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219단지, 충전시설 1,638기를 대상으로 기설치된 완속 충전기를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하며, 지상으로 이전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화재진압 여건 등을 고려한 관계 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으로 우리 도는 이에 맞추어 재원 등을 검토하고 예산 범위 내 단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설치된 지하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충전방해 행위, 위험물 적치 등 관련법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기축 공동주택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를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1년 유예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전담팀에서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속 논의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전북자치도도 지난 8월에 구성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대책 보완과 개선 과제를 추가로 발굴 해갈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도민 불안감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추가 대응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청년축제 '팡파르'

청년 토크콘서트 · 드론 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1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0일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축제'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청년나래'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청년이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그리며 9월 12일까지 사흘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첫날 개막식에는 약 3,0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축제의 시작을 성대하게 알렸다.

'청년나래'라는 주제는 전북자치도와 청년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미래를 의미하며, 축제는 청년 서포터즈의 기획으로 이루어졌고, 도내 청년들의 투표로 주제와 프로그램이 최종 결정됐다.

첫날 기념식에서는 청년정책 비전 선포식과 더불어 드론 라이트쇼 및 개막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드론 쇼는 '도전과 기회의 전북, 함께 성장하는 전북 청년'을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정책 비전을 밤하늘에 화려하게 담아내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축하 공연에서는 도내 청년 예술인들과 연예인들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축제 기간 동안 전북의 여러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들이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북 청년정책 비전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홍보하는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축제는 9월 12일까지 이어지며, 청년 토크콘서트, 청년정책 홍보관, 도내 대학 홍보관, 청년 프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만호 기자

도내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속도'

전북자치도, 행안부 특별교부세 210억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1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교세는 지방비 분담액 중 일부로, 시설 피해 복구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다.

확보된 21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는 도 본청 105억과 함께 호우 피해가 심각했던 4개 시군(군산, 익산, 완주, 무주)에 105억원이 배정됐다. 이로 인해 지방비 부담의 45.7%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감되며,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7월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전북 지역에서는 435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를 복구하는데 총 459억원(도비 215, 시군비 244)의 지방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신속한 행정 절차를 통해 도내 시·군에 교부되어, 실시 설계비와 복구 작업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협력하여 토지 보상과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복구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피해 시설은 내년도 우기 전에 복구를 완료하고, 3억 원 이상의 시설은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완료해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양파 가격 안정 대책 선제적 추진

양파 수급 관리 협의회를 통해 수급 관리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재배 면적과 작황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큰 양파에 대한 가격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NH농협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도내 주산지 시·군과 농협, 생산자단체, 자조금협회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양파 수급 관리 협의회'를 개최했다.

양파 수급 관리 협의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의2 및 '밭작물 주산지 수급 거버넌스 운영' 시행 지침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자율적 수급 조절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행정, 유통, 생산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양파 수급 정책을 논의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노지채소인 양파와 마늘은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며, 재배 면적과 작황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높아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도는 주산지 시·군과 농협, 생산자단체, 자조금협회, 농촌경제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광역 수급 관리 협의회를 통해 사전 생산 정보를 예측하고 공유하며, 수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양파 수급 관리 협의회 운영 규정을 심의하고, 도내 양파 수급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며, 가격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수급 조절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급 조절 프로세스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아동학대 대응 실무자 힐링 · 소통의 시간

도, 연대강화 워크숍 개최

전자치도는 아동학대 대응 현장 최일선 실무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북자치도는 10일부터 12일까지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과 전주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업무 소통과 힐링을 위해 '연대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아동학대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3일간 진행된다.

도 및 시군, 경찰, 교육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무자 160명이 참여하며, 버크만 진단을 통해 업무 소통 방식 진단, 팀 빌딩 활동, 식물원 관람, 연극관람, 공방 체험 등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는 24시간 대기상태로 인한 부담, 학대 행위 의심자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높은 직무 스트레스와 함께 퇴사율도 높은 상황이다. /이만호 기자